

2024기후총선프로젝트 정책토론회

2024 총선,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2024년 3월 20일(수)

14:00~16:00

한국YWCA연합회 강당

서울 중구 명동길 73 페이지명동 4층

▶ 유튜브 생중계

한국YWCA 채널



2024기후총선프로젝트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산그린트러스트,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에코생협,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2024기후총선프로젝트 정책토론회>

2024 총선,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일 시 | 2024년 3월 20일(수) 14:00~16:00

장 소 |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산그린트러스트,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에코생협,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한살림연합,
한국YWCA연합회,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개회 14:00~14:20
 - 인사말 :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발제: 14:20~14:50
 - 제22대 총선 기후·에너지분야 12개 정책 제안
권경락 플랜1.5 활동가

- 지정토론: 14:50~15:20
 - (좌장)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이사
 -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종합토론: 15:20~16:00

발제

- 제22대 총선 기후·에너지분야 12개 정책 제안
 권경락 플랜1.5 활동가

[2024 기후총선 프로젝트]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제안

플랜 1.5 권경락 활동가

2024-03-20

22대 총선, 기후총선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



2

'2024 기후총선 프로젝트'가 제안하는 공약 의제

[시민]

- 1 도시부터, 빈 곳부터!
시민참여형 태양광/RE100 확대

- 2 재난 대비는 미리미리!
기후적응 인프라 대책 확충

- 3 미세먼지, 기후변화 막는!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

- 4 짚관짚관 시농은 이제 그만!
에너지 복지 예산 3배 확대

[지역]

- 5 지역 공동체와 경제 살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도입

- 6 정의로운 전환, 지금부터 시작!
석탄발전 지역첨단 특구 지정

- 7 농촌 감소 막고 지역활성화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 8 탄소흡수원을 지키고 늘려가는!
자연자원충량제 도입

[산업/일자리]

- 9 재생에너지 후퇴 안돼!
RE100 위한 보급 목표 재상향

- 10 신기술 타령은 이제 그만!
산업계 에너지효율 강화제 도입

- 11 지속가능한 산업/일자리 창출!
한국형 IRA 법안 제정

[재원]

- 12 지속가능한 재정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

3

1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

전기요금도 아끼고 기후변화도 막는 '시민 주도' 태양광 확대 필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내년부터 중단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평면시설로, 발전용량은 325W 안팎, 설치비는 약 50만원이다.

그동안 설치비의 70%를 서울시가 설치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담했으며 10%를 차제구가 추가로 지원해 개인은 14%인 7만원만 내면 설치가 가능했다.



- 도시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중심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나, 현재는 확대는 커녕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현실임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가용 및 마을, 아파트 전용 태양광 지원 예산 3배 확대
- 자가용 태양광의 '분산 편익' 제공을 위한 분산에너지법 개정

- 산업단지, 도로, 주차장 등 유희부지의 태양광 잠재량은 50GW 이상이나... 공공기관의 의지 부족 및 관련 규제 미흡으로 제대로 추진 안됨
- 도로, 주차장 등 유희부지 발굴을 통해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
- 일정 규모 이상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산업입지법 개정

2 기후적응 인프라 대폭 확충

'임시방편' 대책은 그만



- 폭염, 침수 등 기후위기 심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임시방편임('23년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 재난약자를 위한 통합적인 재난안전정책 수립 및 공공돌봄 서비스 예산 확대

노동자 보호는 뒷전



-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인식이 확산되었으나,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

- 작업중지권과 임금 보전, 적정 휴게시설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축소되는 도시숲 예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인 도시숲 조성 예산은 갈수록 축소('23년 2,070억 → '24년 1,410억원)

- 도시숲 보전과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도시숲 예산 3배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확대

3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

대중교통 활성화는 여야 모두 찬성하나... 속도와 범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

버스·지하철요금 환급 'K-패스' 도입 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서비스로, 전월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청소년은 50%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기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 정부는 2030 NDC 달성 위해 '30년까지 수요관리 4.5% 줄일 계획이나, 구체적인 이행 수단은 없음
 - 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및 노면적 이용 확대를 통해 수요관리 목표 달성이 가능함
- 월 1만원 무제한 패스 도입 등 **대중교통법 개정**

4 에너지 복지 예산 3배로 확대

'말로만 복지 확대'가 아닌 제도/예산이 뒷받침되는 에너지 복지



연료비 폭등으로 더 커진 불평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최하위 계층 소득 중 연료비 비중 10%
최고 소득층은 0.8%로 불평등 더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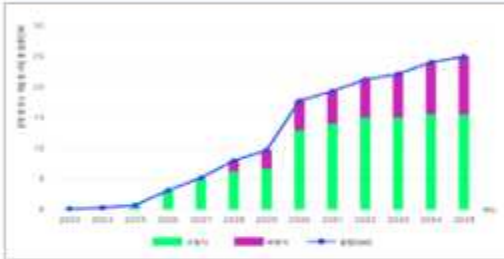
전기·가스값 폭등하자 정부 지원 2배
에너지빈곤 장기계획 없이 일시 대책

에너지복지 더 넓혀 사각지대 없애야
기후위기 대응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 현재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는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하며, 에너지 취약계층 중 15%에 불과
 - 까다로운 지원 조건 완화,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 대폭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취약계층 대상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관련 예산을 현재 대비 3배로 대폭 확대**
- 에너지 복지 대상을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에너지법 개정**

5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 위해 계획입지 및 이익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시급



- 국내 잠재량 624GW, 일자리 창출 15만개 효과를 보유한 해상풍력은 미래 핵심 먹거리...
-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발굴을 통해 인허가 기간 축소(약 50%)로 '30년 RE 목표 달성 가능

- 현재는 추가 REC 가중치 부여에 따른 협동조합 등을 통한 지분출자 혹은 채권매입에 한정
- 주민참여 방식 확대 및 지역 기금, 현물 편익, 요금 지원 등 이익공유제 체계 구체화 필요

22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One-Stop Shop) 특별법 제정 재추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6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

'유아무야' 흐지부지된 탈석탄법 통과 및 정의로운 전환



- '22년 시민 5만명이 청원한 '탈석탄법' 및 유사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는 전무
- 석탄발전 폐쇄를 위한 규제 및 지원 방안, 절차와 시기를 구체화한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
- '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명시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한 탈석탄법 제정

-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약 120억 수준의 '공정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대부분 취업 알선, 교육 지원에 국한되어 종합적인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임
- 탈석탄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신속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7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농가에도 도움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논의 본격화해야



- 21대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추진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소극적인 정부 입장, 농촌과의 공존 가능성,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는 되지 못함
- 지역 먹거리 지키고 에너지 전환도 일구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 임차농 참여 가능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10

8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산림 등 탄소흡수원의 손실과 무분별한 개발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도입 필요



- 21대 국회에서 자연자원총량 개념이 도입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 사업자의 자율에 따라 복원 및 복구하도록 맡기는 방식으로는 탄소흡수원 손실을 상쇄할 수 없음
- 산림 축소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자연자원총량제를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산림 보전에 기여하는 지자체,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폭 확대**

11

9 RE100 지원을 위한 2030 보급 목표 재상향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을 위한 법제도/인프라의 근본적 변화 필요



“송전선로 건설기간 30% 단축”... 정부,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

선업부는 무탄소(CF) 전환을 확대하고 적체해소 전력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계통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수립했다. 핵심 목표로 스텝심 기간망 건설기간 30% 단축, 스송전선로 건설규모 10% 절감, 스계통 유연성 2배 증가를 제시했다.

무선 전역의 ‘동역’ 역할을 하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단축한다. ‘국가기간 전략형 특수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공동조항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차 전략영위원회를 신설한다. 안-작가를 위한 특례시장을 기존 15개에서 32개로 확대한다.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보상제도도 도입한다.

• OECD 골짜기 수준인 재생에너지 보급률 대폭 개선을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목표 반영

• 위 방안은 원전/석탄을 위한 것으로, 재생E에 초점을 맞춘 입법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재상향(21.6 → 30.2%)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수요관리 확대 및 신규 원전/화석연료 금지를 전제로 한 **전력계통 혁신 특별법 제정**

12

10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

‘자발적 감축’에 대한 ‘지원’ 위주의 제도의 한계



연도	사업내용	구분	연도
2011	에너지 절약사업 간 연계사업 및 사업장내 에너지 진단사업(2% 이상 절약사업)	정부-기업	2011
2012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기업-정부	2012
2013-2017	(기업)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정부)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기업-정부	2013-2017
2018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정부)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기업	
2019-2020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정부)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정부	2019-2020
2021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정부)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정부-기업	

• 낮은 전기요금과 예산 삭감에 따라 산업 부문 투자는 대폭 축소('11년 3,209 → '22년 705억원)

• 정부 제도는 다소비사업장 대상 연평균 1% 개선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한계가 명확함

• 산업 부문 내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매년 5%씩 강화하는 의무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13

11 한국형 IRA 법안 제정

‘보여주기’식이 아닌 구체적인 산업 전략이 담긴 ‘한국형 IRA’ 통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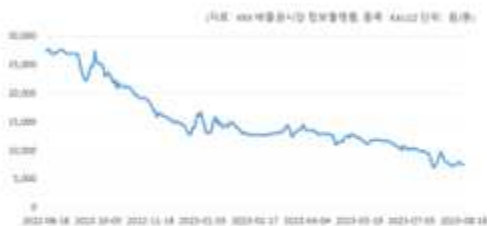


- 21대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2차전지, 반도체 지원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을 발의...
-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추진 필요
-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탄소중립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IRA 특별법 제정**

16

12 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

‘오작동’ 남발하는 배출권거래제



- 산업계 과잉할당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배출권 가격은 1만원/톤 이하 급락
- 10%에 불과한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율 강화, 2030 NDC 목표와 괴리된 총량 개선이 시급
- 유상할당 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법 개정**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검토)

배출권거래제 강화로 재원 마련 가능

2024년에도 기후대응기금 또 삭감

국회 심의과정에서 240억 추가 삭감- 총 918억 줄어

(한경일보) 정의당 정책당 의원·기획재정부위원회가 2024년도 예산안 확정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정부안에서 240억원 삭감된 20,891억원으로 최종적으로는 지난해 예산안 20,467억원에서 424억원이 삭감됐다.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중대요구가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은 새로운 예산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본회의 수정안의 기후공통계획을 보면 기후대응기금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규모가 기존의 489억원에서 112억원이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원기금으로 부타의 전입도 17억원을 줄였다.

- 배출권 가격 하락에 따라 주요 수입원인 경매 수입은 감소('21년 3,068억 → '24년 2,897억원)
- 제4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유상할당 100% 달성 시 **기금 예산을 현재 수준 대비 3배 확대 가능**

16

각 정당들의 답변 결과

시민을 살리는 탄소중립	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미래통합당	바른미래당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	찬성	무응답	국회발의안건	무응답	찬성	찬성
기후적응 인프라 대책 확충	찬성	무응답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대중교통 3만만 배스 도입	찬성	무응답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에너지 복지 예산' 3배로 확대	찬성	무응답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지역을 살리는 탄소중립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	찬성	무응답	국회발의안건	무응답	찬성	찬성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청정산업 특구 지정	찬성	무응답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광발전 성능형 태양광 모델 수립	찬성	무응답	국회발의안건	무응답	찬성	찬성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찬성	무응답	국회발의안건	무응답	찬성	찬성
산업과 일자리를 살리는 탄소중립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보급 목표 대상화	찬성	무응답	국회발의안건	무응답	찬성	찬성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	찬성	무응답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한국형 ICA 법안 제정	찬성	무응답	국회발의안건	무응답	찬성	찬성
탄소중립 자원						
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	찬성	무응답	국회발의안건	무응답	찬성	찬성

• 답변에 응답한 4개 정당은 각론 수준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찬성 의견

• 특히 기후적응 인프라 확대, 에너지 복지 예산 3배 확대, 시민참여형 태양광 지원 확대 등 야권 4개 정당 모두 찬성 입장

• 그 밖에 석탄발전 폐지 지역 대상 정의로운 전환,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산업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의무화도 찬성

16

요약 및 제언

• 기후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몰-구도-이슈라는 선거의 3대 요소 중에서 여전히 기후위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음

• 향후 22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기후의제'를 기존 정당들에게 선제적으로 묻고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12대 기후에너지 의제에 대한 정당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차이를 조정해서 22대 국회에서 입법 및 예산에 반영시키려는 이후의 노력이 필요함

17

지정토론

- (좌장)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이사
-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야권 4 개 정당, 기후 민생 챙기기로 한 목소리

- 13 개 시민·환경 단체로 구성된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22 대 총선 앞두고 주요 정당 6 곳에 '12 대 기후에너지 정책' 에 대한 입장 질의
-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야권 4 개 정당, 기후 적응 예산 확대, 에너지 복지 예산 확대 등 시민 대상 기후 에너지 공약 공감대 확인... 국민의힘, 개혁신당 답변 없어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야권 4 개 정당은 22 대 차기 국회에서 기후적응 인프라 및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반지하 참사, 오송 지하철도 등 폭우 등을 겪으며 기후 위기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 등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민생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에코생협, 플랜 1.5, 한국 YWCA 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13 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20 일(수) 오후 2 시 서울시 중구 한국 YWCA 연합회관 강당에서 '12 대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정당에 보낸 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하고 시급한데도 21 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거나 22 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기후·에너지 정책들을 중심으로 '12 대 기후에너지 정책'을 선정했으며, 지난 5 일 주요 정당 6 곳에 정책 제안서를 보내 각 정당의 입장을 물었다.

주요 제안에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도로,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 약자 및 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 예산 확대 △대중교통 확대 및 공공성 강화 등 시민들을 위한 기후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석탄폐지 특구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한국형 IRA 법안 제정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 지역 활성화 및 산업 일자리를 위한 정책 방안도 포함됐다. 자원 마련 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강화 및 탄소세 도입(중장기)을 제안했다.

답변 취합 결과,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정책제안서에 응답한 야권 4 개 정당은 이들 단체가 제안한 12 개 정책 대부분에 찬성했다. 민주당의 경우 1 개를 제외한 11 개 정책에 대해 찬성했으며, 조국혁신당은 모든 정책안에, 녹색정의당의 경우 일부 조건부 포함 12 개 정책안에 대해 찬성했다.

특히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 약자 및 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 예산 확대, △에너지 복지 예산 3 배 확대,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등 시민들을 위한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한 야권 4 개 정당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해(조건부 포함), 관련 정책들이 22 대 차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석탄발전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무분별한 산림 파괴를 막고 산림 보전에 기여하는 지자체와 주민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산업 에너지 효율 개선 의무화 등 야권 4개 정당이 공통으로 찬성하는 정책은 전체 12개 중 7개에 달했다(조건부 포함).

다만,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 정당 중 유일하게 '대중교통 1만 원 패스 도입'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민주당은 "(대중교통) 패스 자체에는 동의하나, 민주당은 성인 월 5만 원, 청년 월 3만 원, 노인 무상으로 공약을 별도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녹색정의당의 경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나 '한국형 IRA 법안 제정'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에 대해 통제되지 않은 지원에 대해서는 보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보당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나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등에 대해 "공영화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며 "세부적인 내용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정책질의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등에서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에 참여한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는 "21대 총선 대비 상대적으로 기후 의제에 대한 정당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여전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구체적인 기후 의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기후 의제가 입법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2030년 NDC 달성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어, 각 정당이 제시한 기후 공약과 의제에 대한 입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향후 22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법안 및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 정당들과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끝>

-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참여단체 목록 총 13 곳 (가나다순):
 -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산그린트러스트,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에코생협,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플랜 1.5, 풀씨행동연구소, 한국 YWCA 연합회,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별첨 1.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제안한 12대 정책 내용
- 별첨 2.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당별 답변 결과

[별첨 1]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에서 제안한 12 대 제안 내용

부문	공약 의제	제안 내용 및 요구사항
<p>시민을 살리는 탄소중립</p>	<p>① 도시부터, 빈 곳부터!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란다 미니 태양광(지자체), 자가용 가정 및 마을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 예산 최소한 3배 확대 및 분산에너지법 개정 추진 • 도로, 주차장 등 공공부문 유휴부지 발굴을 통해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 및 일정 규모 이상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산업입지법 개정 등 추진
	<p>② 폭염, 한파 등 재난 대비는 미리미리! 기후적응 인프라 예산 대폭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되는 재난약자(여성 및 취약계층 등)를 위한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예산 확대 • 도시 속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을 줄이는 도시숲의 보전과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도시숲 예산 3배로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예산 확대 추진
	<p>③ 미세먼지 줄이고 기후변화 막는!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수요관리 4.5%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이외에도 대중교통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시민들의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의 접근성 및 공공성 강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월 1만원 무제한 패스 도입 등 대중교통법 개정 추진

	<p>④ 찢끔찢끔 시늉만 내는 것은 그만! ‘에너지 복지 예산’ 3 배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수급 세대에 연간 34만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차상위계층을 대상에 포함하고 및 지원 규모도 연간 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예산을 3배 늘리고(6,800억원 → 2조원) 에너지법 개정도 추진
<p>지역을 살리는 탄소중립</p>	<p>⑤ 지역 공동체와 경제 살리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 추진 및 미래 먹거리인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One-Stop Shop) 특별법 제정 추진 • 주민참여 방식 확대 및 지역사회 기금, 현물 편익, 전기요금 지원 등 이익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
	<p>⑥ 정의로운 전환, 지금부터 시작!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기준 모든 국내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탈석탄법 제정 추진 • 탈석탄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신속 지정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구축하고 현행 12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최소한 3배로 확대
	<p>⑦ 농촌 인구 감소 막고 지역 활성화 위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 수입 이외 태양광 판매 수익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마을형 협동조합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 •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임차농 참여 가능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p>⑧ 탄소흡수원을 지키고 늘려가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면적 축소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연자원 총량제(Biodiversity offset)를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추진 • 산림 보전에 기여하는 지자체와 주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대폭 확대
<p>산업/일자리를 살리는 탄소중립</p>	<p>⑨ 재생에너지 후퇴 안돼!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보급 목표 재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발전량 비중 30% → 20%)로 인해 국내 태양광 시장 축소 및 사업장 폐쇄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 보급 목표 재상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혁신 특별법 제정 추진
	<p>⑩ 신기술 타령은 이제 그만!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30년까지 연간 에너지 효율 2배 강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국내 시장 규모는 오히려 지속 감소 중 (’13년 3,166억 → ’22년 705억) •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매년 5%씩 강화하고 세계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 추진
	<p>⑪ 지속가능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세계 혜택 및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제정, 추진 중 • 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친환경 신산업 육성 및 전. 후방 공급망 강화를 위해 보조금 및 세계 혜택을 골자로 한 한국형 IRA 특별법 제정 추진

	<p>⑫ 지속가능한 재정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p> <p>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제안한 의제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유상할당 강화를 통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위해 배출권거래법 개정 및 탄소세법 제정(중장기), 기후대응기금 예산 3배로 확대(2.4조 → 7조)
--	--	--

[별첨 2]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대한 정당별 답변 결과 및 회신 내용

공약 의제	국민의힘	더불어 민주당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①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	무응답	찬성	찬성 (조건부)	무응답	찬성	찬성
② 기후적응 인프라 예산 대폭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③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		반대	찬성		찬성	찬성
④ ‘에너지 복지 예산’ 3배로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		찬성	찬성 (조건부)		반대	찬성
⑥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⑦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찬성	찬성 (조건부)		보류	찬성
⑧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찬성	찬성 (조건부)		찬성	찬성
⑨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보급 목표 재상향		찬성	찬성 (조건부)		반대 (일부)	찬성
⑩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⑪ 한국형 IRA 법안 제정		찬성	찬성 (조건부)		찬성 (부분)	찬성
⑫ 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		찬성	찬성 (조건부)		반대 (일부)	찬성

[민주당]

공약 의제	제안 내용 및 요구사항	의견 (찬성/보류/반대)	비고
① 도시부터, 빈 곳부터!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는 전기요금 절감, 마을에는 소득 확대를 위한 자가용 및 마을, 아파트 전용 태양광 대상 지원 예산 3배 확대 및 분산에너지법 개정 추진 • 도로, 주차장 등 유휴부지 발굴을 통해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 및 일정 규모 이상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산업입지/집적법 개정 추진 	찬성	다만, 지원규모는 추후 논의 필요
② 폭염, 한파 등 재난 대비는 미리미리! 기후적응 인프라 대폭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되는 재난약자(여성 및 취약계층 등)를 위한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예산 확대 • 폭염과 혹한 등 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과 임금 보전, 적절한 휴게시설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관련 예산 확보 • 도시 속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을 줄이는 도시숲의 보전과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도시숲 예산 3배로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예산 확대 추진 	찬성	

<p>③ 미세먼지 줄이고 기후변화 막는!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수요관리 4.5%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이외에도 대중교통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시민들의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의 접근성 및 공공성 강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월 1만원 무제한 패스 도입 등 대중교통법 개정 추진 	<p>반대</p>	<p><u>패스 자체는 동의</u>하나 민주당은 성인 월5만원, 청년 월3만원, 노인 무상으로 공약을 추진 중이며, <u>월1만원 무제한 패스는 부동의</u></p>
<p>④ 찝끔찝끔 시늉만 내는 것은 그만! '에너지 복지 예산' 3배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수급 세대에 연간 34만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차상위계층을 대상에 포함하고 및 지원 규모도 연간 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예산을 3배 늘리고(6,800억원 → 2조원) 에너지법 개정도 추진 	<p>찬성</p>	<p>다만, 지원규모는 추후 논의 필요</p>
<p>⑤ 지역 공동체와 경제 살리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 추진 및 미래 먹거리인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One-Stop Shop) 특별법 제정 추진 • 주민참여 방식 확대 및 지역사회 기금, 현물 편익, 전기요금 지원 등 이익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 	<p>찬성</p>	
<p>⑥ 정의로운 전환, 지금부터 시작!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명시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탈석탄법 제정 추진 • 탈석탄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신속 지정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구축하고 현행 12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대폭 확대 	<p>찬성</p>	

<p>⑦ 농촌 인구 감소 막고 지역 활성화 위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 수입 이외 태양광 판매 수익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마을형 협동조합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 • 지역 먹거리 지키고 에너지 전환도 일구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임차농 참여 가능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p>찬성</p>	
<p>⑧ 탄소흡수원을 지키고 늘려가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면적 축소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연자원 총량제(Biodiversity offset)를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추진 • 산림 보전에 기여하는 지자체와 주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대폭 확대 	<p>찬성</p>	
<p>⑨ 재생에너지 후퇴 안돼!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보급 목표 재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발전량 비중 30% → 20%)로 인해 국내 태양광·풍력 시장 축소 및 사업장 폐쇄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 보급 목표 재상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혁신 특별법 제정 추진 	<p>찬성</p>	<p>전력계통혁신특별법은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할지, 기존 법령 개정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 필요</p>
<p>⑩ 신기술 타령은 이제 그만!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30년까지 연간 에너지 효율 2배 강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국내 시장 규모는 오히려 지속 감소 중 ('13년 3,166억 → '22년 705억) •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매년 5%씩 강화하고 세계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 추진 	<p>찬성</p>	

<p>⑪ 지속가능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제정, 추진 중 • 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친환경 신산업 육성 및 전. 후방 공급망 강화를 위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한국형 IRA 특별법 제정 추진 	<p>찬성</p>	
<p>⑫ 지속가능한 재정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제안한 의제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유상할당 강화를 통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위해 배출권거래법 개정 및 탄소세법 제정(중장기), 기후대응기금 예산 3배로 확대(2.4조 → 7조) 	<p>찬성</p>	<p>국제동향과 국내 산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교통에너지 환경세제 등 에너지 관련 세제를 탄소세 체계로 단계별 전환할 것을 검토</p>

[녹색정의당]

공약 의제	제안 내용 및 요구사항	의견 (찬성/보류/반대)	비고
① 도시부터, 빈 곳부터!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는 전기요금 절감, 마을에는 소득 확대를 위한 자가용 및 마을, 아파트 전용 태양광 대상 지원 예산 3배 확대 및 분산에너지법 개정 추진 • 도로, 주차장 등 유휴부지 발굴을 통해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 및 일정 규모 이상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산업입지/집적법 개정 추진 	조건부 찬성	녹색정의당은 의사결정에 대한 지역민·당사자들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태양광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임.
② 폭염, 한파 등 재난 대비는 미리미리! 기후적응 인프라 대폭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되는 재난약자(여성 및 취약계층 등)를 위한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예산 확대 • 폭염과 혹한 등 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과 임금 보전, 적절한 휴게시설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관련 예산 확보 • 도시 속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을 줄이는 도시숲의 보전과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도시숲 예산 3배로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예산 확대 추진 	찬성	
③ 미세먼지 줄이고 기후변화 막는!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수요관리 4.5%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이외에도 대중교통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시민들의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의 접근성 및 공공성 강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월 1만원 무제한 패스 도입 등 대중교통법 개정 	찬성	

	추진		
④ 찢끔찢끔 시늉만 내는 것은 그만! '에너지 복지 예산' 3배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수급 세대에 연간 34만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차상위계층을 대상에 포함하고 및 지원 규모도 연간 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예산을 3배 늘리고(6,800억원 → 2조원) 에너지법 개정도 추진 	찬성	녹색정의당의 에너지 공약의 "기후·에너지 취약 계층에 생활 필수에너지를 기본권으로 무상 보장"과 유사한 취지로 이해됨. 녹색정의당의 공약도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 향후 더 확대하는 안.
⑤ 지역 공동체와 경제 살리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 추진 및 미래 먹거리인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One-Stop Shop) 특별법 제정 추진 • 주민참여 방식 확대 및 지역사회 기금, 현물 편익, 전기요금 지원 등 이익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 	조건부 찬성	제주도 해상풍력 발전 등 정부 주도로 기존 개발·화석연료 사업과 다른 바 없는 "약탈적 재생에너지 전환" 사례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임.
⑥ 정의로운 전환, 지금부터 시작!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명시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탈석탄법 제정 추진 • 탈석탄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신속 지정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구축하고 현행 12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대폭 확대 	찬성	
⑦ 농촌 인구 감소 막고 지역 활성화 위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 수입 이외 태양광 판매 수익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마을형 협동조합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 • 지역 먹거리 지키고 에너지 전환도 일구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임차농 참여 가능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조건부 찬성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태양광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임.

<p>⑧ 탄소흡수원을 지키고 늘려가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면적 축소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연자원 총량제(Biodiversity offset)를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추진 •산림 보전에 기여하는 지자체와 주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대폭 확대 	<p>조건부 찬성</p>	<p>녹색정의당 생태 공약에 환경영향평가제 개선에 대한 공약이 있어 해당 부분은 동의하지만, 인센티브 중심의 생태계보전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p>
<p>⑨ 재생에너지 후퇴 안돼!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보급 목표 재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발전량 비중 30% → 20%)로 인해 국내 태양광·풍력 시장 축소 및 사업장 폐쇄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보급 목표 재상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혁신 특별법 제정 추진 	<p>조건부 찬성</p>	<p>녹색정의당 공약은 전력계통 혁신 특별법 제정의 경우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법 등 타법에서 개정하는 내용.</p>
<p>⑩ 신기술 타령은 이제 그만!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30년까지 연간 에너지 효율 2배 강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국내 시장 규모는 오히려 지속 감소 중 ('13년 3,166억 → '22년 705억)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매년 5%씩 강화하고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 추진 	<p>찬성</p>	
<p>⑪ 지속가능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제정, 추진 중 •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친환경 신산업 육성 및 전. 후방 공급망 강화를 위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한국형 IRA 특별법 제정 추진 	<p>조건부 찬성</p>	<p>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미국의 IRA와 같은 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지원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p>

<p>⑫ 지속가능한 재정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제안한 의제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유상할당 강화를 통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위해 배출권거래법 개정 및 탄소세법 제정(중장기), 기후대응기금 예산 3배로 확대(2.4조 → 7조) 	<p>조건부 찬성</p>	<p>다만 녹색정의당은 배출권거래법 개정보다 강력한 탄소세 등을 통해 자원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등을 위하여 연간 50조에 가까운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p>
--	--	---------------	---

[진보당]

공약 의제	제안 내용 및 요구사항	의견 (찬성/보류/반대)	비고
<p>① 도시부터, 빈 곳부터!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는 전기요금 절감, 마을에는 소득 확대를 위한 자가용 및 마을, 아파트 전용 태양광 대상 지원 예산 3배 확대 및 분산에너지법 개정 추진 • 도로, 주차장 등 유휴부지 발굴을 통해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 및 일정 규모 이상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산업입지/집적법 개정 추진 	찬성	
<p>② 폭염, 한파 등 재난 대비는 미리미리! 기후적응 인프라 대폭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되는 재난약자(여성 및 취약계층 등)를 위한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예산 확대 • 폭염과 혹한 등 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과 임금 보전, 적절한 휴게시설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관련 예산 확보 • 도시 속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을 줄이는 도시숲의 보전과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도시숲 예산 3배로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예산 확대 추진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하고자 함. 이를 위해 돌봄정책기본법 제정, 돌봄부 신설, 돌봄노동자기본법, 아동수당 만18세 확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자지원법 제정,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등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종합 정책을 설계함. ▶ 폭염 한파시 작업중지권 부여, 재해 발생사업장 직접고용 강제, 휴게공간 확보의무 등

<p>③ 미세먼지 줄이고 기후변화 막는!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수요관리 4.5%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이외에도 대중교통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시민들의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의 접근성 및 공공성 강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월 1만원 무제한 패스 도입 등 대중교통법 개정 추진 	<p>찬성</p>	<p>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약</p> <p>▶ 진보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인프라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공공교통'의 확대를 모색하고자 함. 이에 따라 찬성의견과 함께 교통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음, 청소년 무상교통을 시작으로, 무상교통과 공영화 모델을 함께 모색.</p>
<p>④ 찝끔찝끔 시늉만 내는 것은 그만! '에너지 복지 예산' 3배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수급 세대에 연간 34만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차상위계층을 대상에 포함하고 및 지원 규모도 연간 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예산을 3배 늘리고(6,800억원 → 2조원) 에너지법 개정도 추진 	<p>찬성</p>	<p>▶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의 중첩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음. 에너지복지의 확대는 필요함, 진보당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수준의 에너지는 비용이 아닌 권리로서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에너지 이용권'을 도입하고자 함. 이와 함께, 최저주거기준의 강화 등의 대안 역시 마련하고 있음.</p>

<p>⑤ 지역 공동체와 경제 살리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 추진 및 미래 먹거리인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One-Stop Shop) 특별법 제정 추진 • 주민참여 방식 확대 및 지역사회 기금, 현물 편익, 전기요금 지원 등 이익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 	<p>반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등에서 이익공유제는 농민들의 의사와 반하여, 실제 임차농을 농지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우리나라 농민의 70%가 임차농인 현실에서 이는 농산어촌을 대도시로 내주고, 이를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 진보당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영화된 재생에너지 확대'가 당론임. 농업과 농민의 삶도 당연히 기후위기로부터 지켜져야 함.
<p>⑥ 정의로운 전환, 지금부터 시작!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명시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탈석탄법 제정 추진 • 탈석탄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신속 지정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구축하고 현행 12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대폭 확대 	<p>찬성</p>	
<p>⑦ 농촌 인구 감소 막고 지역 활성화 위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 수입 이외 태양광 판매 수익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마을형 협동조합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 • 지역 먹거리 지키고 에너지 전환도 일구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임차농 참여 가능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p>보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수요지인 도시와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대책이 우선이며, 에너지 지역자립을 기본 당론으로

	모델 수립		하는 입장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 검토가 더 필요함. 현재 조건에서 진보당의 입장은 보류함.
⑧ 탄소흡수원을 지키고 늘려가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면적 축소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연자원 총량제(Biodiversity offset)를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추진 •산림 보전에 기여하는 지자체와 주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대폭 확대 	찬성	
⑨ 재생에너지 후퇴 안돼!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보급 목표 재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발전량 비중 30% → 20%)로 인해 국내 태양광·풍력 시장 축소 및 사업장 폐쇄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보급 목표 재상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혁신 특별법 제정 추진 	일부 반대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은 필요하나,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는 전력민영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⑩ 신기술 타령은 이제 그만!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30년까지 연간 에너지 효율 2배 강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국내 시장 규모는 오히려 지속 감소 중 ('13년 3,166억 → '22년 705억)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매년 5%씩 강화하고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 추진 	찬성	
⑪ 지속가능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제정, 추진 중 •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친환경 신산업 육성 및 전. 후방 공급망 	부분 찬성	▶ 윤석열 정부의 재벌기업 감세 기조는 시대착오적. 오히려 법인세율 상향, 횡재세 도입 등으로 산업전환을 위한

	<p>강화를 위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한국형 IRA 특별법 제정 추진</p>		<p>재원마련이 필요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동중심 산업전환과 기후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노동자 고용보장, 기후일자리 창출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한국형 IRA를 검토할 수 있음.</p>
<p>⑫ 지속가능한 재정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제안한 의제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유상할당 강화를 통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위해 배출권거래법 개정 및 탄소세법 제정(중장기), 기후대응기금 예산 3배로 확대(2.4조 → 7조) 	<p>일부 반대</p>	<p>▶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나, 이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소득역진적이 될 수 있음. 소득세와 법인세를 확대하여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탄소배출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p>

[조국혁신당]

공약 의제	제안 내용 및 요구사항	의견 (찬성/보류/반대)	비고
① 도시부터, 빈 곳부터!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는 전기요금 절감, 마을에는 소득 확대를 위한 자가용 및 마을, 아파트 전용 태양광 대상 지원 예산 3배 확대 및 분산에너지법 개정 추진 • 도로, 주차장 등 유휴부지 발굴을 통해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 및 일정 규모 이상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산업입지/집적법 개정 추진 	찬성	내용에 동의하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
② 폭염, 한파 등 재난 대비는 미리미리! 기후적응 인프라 대폭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되는 재난약자(여성 및 취약계층 등)를 위한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예산 확대 • 폭염과 혹한 등 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과 임금 보전, 적절한 휴게시설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관련 예산 확보 • 도시 속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을 줄이는 도시숲의 보전과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도시숲 예산 3배로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예산 확대 추진 	찬성	내용에 동의하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

<p>③ 미세먼지 줄이고 기후변화 막는!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수요관리 4.5%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이외에도 대중교통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시민들의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의 접근성 및 공공성 강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월 1만원 무제한 패스 도입 등 대중교통법 개정 추진 	<p>찬성</p>	<p>내용에 동의하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p>
<p>④ 찜찜 찜찜 시늉만 내는 것은 그만! '에너지 복지 예산' 3배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수급 세대에 연간 34만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차상위계층을 대상에 포함하고 및 지원 규모도 연간 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예산을 3배 늘리고(6,800억원 → 2조원) 에너지법 개정도 추진 	<p>찬성</p>	<p>내용에 동의하고 예산규모와 집행시기에 대해 구체적 논의와 필요</p>
<p>⑤ 지역 공동체와 경제 살리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 추진 및 미래 먹거리인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One-Stop Shop) 특별법 제정 추진 • 주민참여 방식 확대 및 지역사회 기금, 현물 편익, 전기요금 지원 등 이익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 	<p>찬성</p>	
<p>⑥ 정의로운 전환, 지금부터 시작!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명시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탈석탄법 제정 추진 • 탈석탄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신속 지정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구축하고 현행 12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대폭 확대 	<p>찬성</p>	<p>석탄발전소 폐쇄 시점과 구체적 계획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 필요</p>

<p>⑦ 농촌 인구 감소 막고 지역 활성화 위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 수입 이외 태양광 판매 수익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마을형 협동조합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 • 지역 먹거리 지키고 에너지 전환도 일구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임차농 참여 가능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p>찬성</p>	
<p>⑧ 탄소흡수원을 지키고 늘려가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면적 축소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연자원 총량제(Biodiversity offset)를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추진 • 산림 보전에 기여하는 지자체와 주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대폭 확대 	<p>찬성</p>	
<p>⑨ 재생에너지 후퇴 안돼!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보급 목표 재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발전량 비중 30% → 20%)로 인해 국내 태양광·풍력 시장 축소 및 사업장 폐쇄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 보급 목표 재상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혁신 특별법 제정 추진 	<p>찬성</p>	
<p>⑩ 신기술 타령은 이제 그만!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30년까지 연간 에너지 효율 2배 강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국내 시장 규모는 오히려 지속 감소 중 ('13년 3,166억 → '22년 705억) •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매년 5%씩 강화하고 세계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 추진 	<p>찬성</p>	

<p>⑪ 지속가능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IRA 법안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제정, 추진 중 •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친환경 신산업 육성 및 전. 후방 공급망 강화를 위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한국형 IRA 특별법 제정 추진 	<p>찬성</p>	
<p>⑫ 지속가능한 재정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제안한 의제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유상할당 강화를 통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위해 배출권거래법 개정 및 탄소세법 제정(중장기), 기후대응기금 예산 3배로 확대(2.4조 → 7조) 	<p>찬성</p>	<p>내용에 동의하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p>